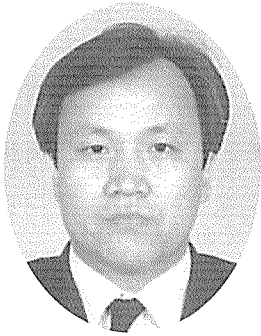


# 전환기에 선 석유산업



송용희

〈에너지경제신문 편집국장〉

## 석

유산업이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석유산업의 개방과 가격자유화 그리고 친환경적인 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규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석유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정유5사, 즉 유공, LG-Caltex정유, 한화에너지, 쌍용정유, 현대정유는 전환기에 따른 진통을 겪고 있다. 가격자유화의 전단계인 연동제는 정부가 가격을 주도하고 있으나, 치열한 유통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정유회사들로서는 경쟁에 따른 고비용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소비자와 물가를 위해서 정부가 가격조정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유통구조는 경쟁체제화 시킨 것이 하나의 모순이다.

소비자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질 좋은 제품생산을 통한 판매경쟁이 이루어져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즉 권리행사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

이런 경쟁여건의 조성은 가격결정에서부터 이뤄져야 하나 우리의 석유산업은 질 좋은 서비스를 강요만 할 뿐 제도적으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유가연동제도 그렇다. 소비자등 경제주체나 자유화 이후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단계라는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연동제의 제도 보다는 앞서가는 소비자, 즉 사회분위기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경영의 목표다. 정상적인 경영을 통한 이윤극대화는 절대적인 기업의 몫이며 그 몫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뒷받침 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석유산업은 거대의 장치산업이며, 막대한 투자비용이 요구되는 산업으로서 장기적인 계획 없이는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중질유분해·탈황설비의 첨단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비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토양환경 오염방지도 비켜갈 수 없는 것이 석유산업의 현주소다.

이런 투자여건조성이 결국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소비자는 이런 투자비용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돼서 좋은 제품과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가격 결정에 있어 이점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규제완화를 수없이 외쳐 왔으나, 석유산업 부문에 한해서만은 아

정상적인 경영을 통한 이윤극대화는 절대적인 기업의 몫이며 그 몫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 감시하고 뒷받침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적도 규제의 고삐를 정부가 쥐고 있으며 이 사이에서 정유5사는 사회분위기에 따라가자니 투자재원이 문제이고, 법과 제도를 따라가자니 소비자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없는 현상을 겪고 있다. 또 하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민원과 관련돼 저유소 건설등이 큰 난관으로 등장되고 있으나 속수무책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공업단지 조성시 저유소부지를 확보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물류비용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에 따른 적기공급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이 8억3천만배럴로 집계되고 있고 세계 석유소비 6위권에 이르고 있을 만큼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물량면에서 봐도 정부가 제도만을 가지고 시장을 좌우할 수 없다.

시장기능의 접점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다. 수요의 분위기는 정부와 소비자의 몫이라면 공급의 몫은 기업들의 역할과 책임이며 이에 수반되는 것이 바로 가격이지 않는가.

이제 시장은 국내로 국한되지 않고 세계시장이 하나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국내 석유산업은 아직도 너무 많은 부문에서 정부의 간섭을 받고 있다고 생각된다.

전술한 부문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것은 지난 30년 이상을 정부는 석유 시장의 전분야를 관리할만큼 규제를 해 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유5사들의 이익까지도 정부가 결정했기 때문이란 점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다.

또 하나 「세계시장의 하나화」에는 석유의 공급주체인 기업들의 경쟁방식과 사고의 전환도 아울러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와 보호 속에서 소비자의 욕구를 무시한 경향이 없지 않았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석유산업에 있어서 최소한 경쟁이라는 용어가 필요 없을 만큼 인주해 온 점이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공급량의 확대에 경영의 초점이 맞춰질 만큼 시장에 대한 서비스 부재현상이 지속됐었다. 그러나 이제 그 연장의 끝을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석유의 공급주체들은 겸손한 질서를 찾는 데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석유시장의 다양성은 피할 수 없다. 어찌면 그 다양성을 처음으로 겪어야 할 석유시장 주체, 즉 공급과 수요측면에 있는 편에서 보면 다소 불안할 수도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시장기능의 자유화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할 때이며, 석유공급주체는 그 나름대로 신뢰감을 보여줄 수 있는 여건조성에 나서줘야 한다. 그러나 이런 여건조성에 있어 무엇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아직까지는 더 크다.

그 점은 앞에서 강조했듯이, 석유산업의 규제부문이 많기 때문이다. 시장의 기능을 소비자와 공급주체들에게 맡길 때 올바른 경쟁체제가 구축될 것이며 진정한 소비문화 형성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상적인 관련기업들의 합리적인 경영이 구축되는 토양 마련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싶다. ♣

정부는 정부대로  
시장기능의 자유화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하며 석유공급 주체는  
그 나름대로  
신뢰감을 보여줄  
수 있는 여건조성에  
나서야 한다